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화중



한국인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600만 명에서 5천100만 명 수준일 때에 경제규모, 복지수준, 생활환경에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2005년 우리나라 인구가 4천814만 명이니까지 적정수준인 데다, 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매년 87만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4년에는 48만 명, 2005년에는 44만 명만이 태어나 적정선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부부가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라는 것은 매우 평범한 상식이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2.1명을 나야한다고 우리나라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이었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쇠락과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출산이다.

한국은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조절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의 억제에만 몰두하다가 인구감소라는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

는 데에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이었을 때부터 대비했어야 할 일이다. 시작에는 늦은 법이 없다고 했으나, 늦었지만 참여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정의 주

이다. 그 재앙이 나와 후손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답은 한 가지이다. 아이를 낳아야 하고, 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흔히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라거나, 여성의 직장생활과 자기실현에 장애가 크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말한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여유

러운 일이다. 양성평등의 밝은 가정을 만드는 데에 협심해야 할 일이다.

이런 측면들은 단순히 정부가 마련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시설 및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민간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문화적·정신적 측면의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출산위기 극복은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의 전국여성대회를 가진 바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나서서 지원해 나가고 힘을 모아야 한다.

자녀가 많은 것을 다복하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가 많은 자녀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부담이 되기도 했었다. 이제는 자녀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로 변했는데 아직도 가정에는 부담이다. 근래에 여유 있는 가정의 주부들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손자·손녀를 보게 되면 씩 가신다고 한다. 자녀가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학교도, 모두 함께 나설 때이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향하여

요과제로 채택해서 대책수립에 착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처럼 정부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크다. 그것은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나서 주어야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인구통계를 놀리지 않더라도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변모해 온 모습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나라의 위기를 넘어 재앙이라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가 있거나 직장을 갖지 않은 여성조차 출산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가정문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는 여성들에게 억압하고 부당이 되어 여성의 출산기피와 독신주의를 조장하게 된다. 근래에는 가부장적 가정문화가 남성들에게도 속박으로 작용한다.

가족의 부양책임을 지지 싫어서 독신을 택하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녀가 좋은 짓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지만 그 안에 억압이나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부자연스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조영호



판사로 임관받아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 앞만 보며 산지도 어느덧 7년.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나이 마흔을 넘기고 보니, 자꾸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법대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도 어쩐지 어색하고, 입고 있는 법복도 내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아무리 신명나고 즐겁게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언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애써도 그 무게를 덜어낼 재주가 아쉽게도 데려온다.

잠이 안 올 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대개는 형사 합의부 배석 판사 시절 만났던 피고인들의 얼굴이다.

처음으로 살인사건을 맡은 후 법정에

잡힌 것이 징역 10년을 살만한 죄가 되는지 그때 나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결혼도 못해보고 평생 감옥에서 살다시피 한 그의 인생에 대하여 깊은 연민이 느껴졌다.

그가 다방에 들어가 녹슨 라디오 한 개라도 훔쳤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다. 그 후 그를 청원감호소로 보냈던 사법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잘 된 일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짐을 시원하게 덜어 주지는 못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소설을 한 권 읽었다. 읽으면

나의 판사 성적표

들어가기 전에 살인범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호기심 어린 생각을 펼쳐버리기 어려웠다. 자기 부인을 살해한 후에 시체를 토막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를 보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주 내성적이고 순하게 생긴 모습이었다. 우리가 거리에서 늘 만나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의 얼굴이다.

그 사람에게도 순수한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운 학창시절과 되돌리고 싶은 부인과의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다.

또 한 사람의 최후 진술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아마 판사를 하는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재판 당시 선 살을 훌쩍 넣긴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도벽으로 경찰서를 드락거리며 자랐다. 출도독질을 끊지 못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다.

그는 보호감호 중에 가출소한 상태에서 야간에 빈 다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경찰에 붙잡혀 또다시 보호감호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의 10년 가량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밤에 다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지도 못하고

서 마흔이 넘어 주택같이 나에게도 훌려내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멋대로 살아온 가슴 아픈 여자와 사형수의 가슴 저민 사랑이야기였다.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한 사형수가 뒤늦게 사랑을 통해 삶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물론 소설이지만, 재판은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증거에 의해 법정에서 인정되는 사실은 결코 실제적 진실일 수가 없고, 어느 정도가 가공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끓다고 내린 판결들이 과연 좋은 판결이었을까? 갈수록 의문이 들고 자꾸만 자신이 없어져 간다. 누군가 나를 회의주의자이고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더라도 굳이 나는 이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세상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는 편하다.

그리고 보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추상과 같이 죄를 물어야 하는 판사로서 나는 아주 빵집이다. 불행하게도 내 판사 성적표는 낙제를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광주지법 판사)

기고

조정래



'고객만족', '고객감동'하면 삼성그룹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및 A/S를 떠올리게 하는 광고의 카피다. 삼성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국가예산과 맞먹는 135조 원, 국가예산(세금)의 8%를 차지하는, 특히 2위 기업이 주목을 단념할 정도로 독주하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의 영향력은 경제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한국사회의 파워조직'조사에서 삼성은 청와대, 대법원, 검찰, 노조 등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삼성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프다. 지난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

는 게 아니라 차별의 지배하에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없게끔 하는 식민정신의 표상이다.

또한 지난해 전교부의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공표 이후 시행한 양업계 간 첫 계약도 갖은 구설을 불여 3개월이 넘도록 미뤘다하니 금년엔 자동차보험에 적자리며 손해를 만을 내세우며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그리고 타 손보사를 앞세워 협상케하고 타 손보사에서는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계약을 시행하면 '의'의 광고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크다면 그 기업은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함께가요 삼성..." 정비업자의 하소연

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거 보험사업자들과 정비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삼성화재를 위시한 손보사들이 97년 이후 7년여 동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동결, 양업계간 분쟁이 지속되자 2003년도에 의원입법하여 영세정비업자를 보호한 것이다.

이런 정부방침에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자배법'을 아예 폐지하려 험안이 돼있다. 영세한 정비사업자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삼성그룹이 표방한 '또 하나의 가족' 등 인류애표 방 이미지를 스스로 조롱하는 행위다.

더욱이 정비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청구금액에서 3~5%를 삼감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중소기업을 보호하

기업적자로 크다면 난립되어 있는 손보사도 대통합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그 래야 자동차정비업계도 적정요금을 받고 손보업체를 대신해 보험가입고객에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다.

이제 삼성화재는 전면으로 나와 손보사가 안고 있는 혼란을 풀어야 한다.

정비사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전국곳곳에 있는 정비사업자의 연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을 동반자적 입장에서 해야려야 한다. 정비사업자도 손보사와 상생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국가 대표기업이라 할 것이다.

평생을 기틀범벅으로 살아온 자동차정비기술자도 자식들에게 멋지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장인으로,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 부회장〉

포장이사 짐 옮길 때 내 집처럼 성의껏 일했으면

교육의 빈부 양극화 막는 대책 서둘러야

동생이 7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 이사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이삿짐을 다루는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다.

업체 직원이 가스 레인지에 붙은 테이프를 잘라낼 때도, 서랍장을 옮길 때 부주의하게 다루면서 가구 이곳 저곳에 흙집을 냈다.

보다 못해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 아니

錢有學 無錢無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제라도 '빈곤층 특별전형'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실시한 뒤 사립대학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전국의 모든 대학들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양극화·빈부의 양극화'를 막는 길이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경제' 손놓은 정치권, 국민들만 고달프다

정치권이 한심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전투구를 벌이며 결별수순을 밟고 있고 야당은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며 1년도 더 남은 대선에 물들하고 있다. 국정현안에 대해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 책임지거나 탐색하는 모습은 없어 국민들만 고통받는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한 5.3%보다 0.9%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 경제연구소의 예측치도 한국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각각 4.3%, LG경제연구원 4.0%, 현대경제연구원 4.2% 등 4% 대로 조�始이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1% 성장했지만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제로(0) 성장에 그쳤다.

그런데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인상분 3.9%의 2배 가까운 6.5%나 오른다. 정

'물류대란' 현실화 되는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광양항의 물동량이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물류대란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대한 방화와 유리창 파손, 대못투척 등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어 국가 물류망 자체가 완전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15일간만 지속돼도 부산항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특히 연말에 수출·입 물동량이 집중돼 이번 파업의 후유증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일으켜 국가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에 들어간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 운임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운송 사업 진입규제 완화로 운송사업자가 급증하면서 물류연대의 파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3년 전 총파업으로 부산항에서 외국선사들이 대거 이탈해 부산항의 물동량이 세계 5위로 전락하는 등 그 후유증은 국민들은 생생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가경제는 갖가지 악재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대란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도 있다. 화물연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 운임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운송 사업 진입규제 완화로 운송사업자가 급증하면서 물류연대의 파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3년 전 총파업으로